제751호

국정브리핑

2003년 11월 6일 목요일
주간 / 비매품

발행인 / 조영동
편집인 / 장동훈
발행처 / 국정홍보처

전 화 (02)3703-2988(편집)
(02)3450-2363(구독)
FAX (02)3703-2991

신행정수도 구상 보고

이전땐 교통비 한해 1조원 절감

전국 주요도시 2시간 이내 접근

2291만평 조성 인구 50만 수용

45조6000억 소요… 정부 11조2000억 부담

국회 · 대법원도 함께 옮겨

충청권에 조성할 새 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총 2291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입지선정기준(시안)이 마련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재정 11조2000억원과 민간부담 34조4000억원을 합쳐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권오규 정책기획수석)과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및 각 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 시안을 보고했다.

연구단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건설이념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입지가 선정되는 데로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본구상을 밝혔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의 미래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 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 도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 · 정보 도시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의 규모는 시가지 1800만평, 녹지벨트 500만평을 합쳐 2291만평으로 조성하고 도시형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기존도시와 분리된 신도시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 하도록 고속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행정수도의 외곽은 순환 · 방사형, 중심지구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인구 170만 감소

연구단은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총 건설비용 중 "11조2000억원의 정부부담은 수도권의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과 민자유치들을 활용하면 8조4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재정부담은 올해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2002년 전국 도로투자비의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증가하는 인구분산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인 교통망이 개선돼 교통비용이 수도권은 2조8000억원, 비충청권은 7000억원 감소하고 충청권은 2조4000억원 증가, 전국적으로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땅값 1.5%, 주택가격 1.0%가 감소하는 부동산 효과도 기대됐다.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시안)' 보고를 통해 "후보지 선정기준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설정하고, 평가기준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기본평가항목으로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등 5가지 기준과 18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시안)은 이달 말 지역 순회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연구단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안길찬기자〉

구독신청 02-3450-2363

추곡수매 지난 1일부터 올해 첫 추곡수매가 시작됐다. 다음달 15일까지 전체 추곡수매물량 520만9000석 가운데 63%인 327만4000석을 전국 5612개 수매장소에서 일제히 수매한다. (사진=전남 화순군 도곡농협에서 현금을 받은 농민들이 돈을 세며 기뻐하고 있다.)

'국정넷포터' 정책제안 싣습니다

본보는 이번 주부터 '국정넷포터 발언대'를 신설, 국정넷포터의 참신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게재합니다. 국정넷포터는 인터넷 국정브리핑(www.news.go.kr)이 운영하는 국민기자제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후 넷포터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좋은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과 관심 바랍니다. 〈7면〉

국정브리핑

"수능 예상지문 출제 논란"

백석의 시 '고향' 교과서에 실린 내용 칸트의 글 인용지문 문제집과 달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연합뉴스〕 '수능 예상지문 출제 논란'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칸트의 글에서 인용한 지문은 모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문제집의 지문과 다르고 예상지문 중 수능에 출제된 백석의 시 '고향'은 현행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출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연합뉴스 보도〕

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 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 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건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이른바 인터넷에서 떠돈다고 하는 예상지문 중 수능에 출제된 백석의 시 '고향'은 현행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출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글이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 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칸트의 글에서 인용한 지문은 모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문제집의 지문과는 다르다.

또 양자역학과 관련된 본 주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및 문제집 등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 이번 수능 언어영역에서 제시된 지문은 출제진들이 새로 구성한 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지문과 동일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국어 관련 문제집은 약 1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 또는 지문의 출처가 설혹 동일하더라도 출제진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했으므로, 기존에 유통되는 문제집의 그것들과 다름을 알린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수능시험이 갖는 특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이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법 부추기는 교육감 선거"

컴퓨터 선거운동 허용 합리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아일보 29일자 기사 '편법 부추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 등을 개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후보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항변이 아니다. 각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보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느끼는 소감이다. 이는 2000년 3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 선거운동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불평이다.

규정에 따르면 두 쪽짜리 선거공보 발행과 선거구별 한 차례의 소견발표회, 개최 여부가 언론기관의 뜻에 달린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가 전부다.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0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을 1)선거공보 발행, 2)소견발표회 개최, 3)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최소화해 지역 교육계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연장하고, 선거운동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며,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동아일보 보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 선거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교육자치 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교육기획과)

"5급 공무원 시험 이공계 50% 확대"

2008년까지 기술직으로 40% 충원

행정자치부는 〔대한매일〕 11월3일자 '기술고시도 우먼파워' 제하의 보도에서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보도〕

기술고시 2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시험문제가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최고 14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술고시 2차시험 합격자 70명 가운데 여성은 8명(11.4%)이었다. 기술고시 여성합격률은 지난 90년대까지는 0~4%에 불과했지만 2000년 6.4%, 2001년 12.2%, 지난해 5.2%, 올해 11.4% 등으로 증가해 왔다.

한 수험전문가는 "행시와 외시에 비해 기술고시 여성 지원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기술고시에서 여성합격률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자치부 입장〕

기사내용중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40%를 기술직으로 충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내용에서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목표달성 기한, 대상 시험 등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분야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조장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인사과)

"설땅없는 기초과학"

정부연구개발투자비의 25%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의 연구비가 공학 기술분야 위주로 지급되고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중앙일보, 10월31일자)에 대해 연구비 지원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초과학은 소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물리·화학·수학·생물·지구과학은 분명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에서 명퇴당하고 있다. 반면 금속공학이나 요업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는 가히 무릉도원을 연상시킬 만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물리·수학·화학·생물·지구과학 하시는 과학자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 각개전투로 엄청난 연구비를 따고 있다. 신소자 기술·전자제품 기술·화학기능재료 기술·세포공학 기술·지질조사 기술·극한 기술 정말 눈물난다. 기초과학을 천대하면서 공학·기술만 살려고 발버둥쳐봤자 오래 못 간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망국의 길이다.

〔과학기술부 입장〕

국가과학기술발전업무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는 목표지향적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기초과학지원을 위해 매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금년에 총 5546억원을 투입해 기초 응용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분야에는 1664억원(30%)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사업별로는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11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 524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40억원, 기타 489억원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은 금년에 총 2697억원을 투입해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기초연구(667억원), 선도과학자육성(44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215억원),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100억원), 여성과학자지원(83억원) 등의 개인 및 소규모 연구지원사업 △우수연구센터(ERC/SRC)육성(652억원),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40억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348억원) 등의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193억원), 초전도 ⤴

주장 엇갈린 '고교 평준화'

교육의 출발은 가려뽑는데 있다 조선일보
전체학력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 한국일보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촉발된 고교 평준화 문제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폐지론'이 더해지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고, 언론의 보도도 유지와 폐지, 또는 보완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문제는 백년대계와 인재양성이라는 총론은 같지만, 학력 하향평준화 여부·사교육 과열의 원인 등 각론의 쟁점이 많다. 논란은 과열되고 있고, 자칫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폐지론에 가깝고, 한국일보·한겨레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운다. 문화일보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연합뉴스는 중립적 시각에서 진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다룬 시리즈에 이어 '평준화는 사이비 종교다'는 사설(10·25)을 통해 강한폐지론의 입장에 섰다. 사설은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뜻이 돼버린 게 평준화 30년의 역사'라면서 '평준화 교육은 영재를 둔재로 만들고, 학습의욕을 잃은 뒤 뒤처진 아이들을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출발은 가려 뽑는데 있고… 학력경쟁을 일부만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비인간적 제도로 매도하는 '교육 사회주의적' 발상이 교육행정 책임자들 사이에 버티고 있는 한 교육의 장래도 없고 나라의 내일도 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도 교육문제 시리즈를 통해 평준화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으며, 칼럼 '유인종 교육감의 고집'(10·27)에서는 '고교 평준화 30년은 학교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대신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부진아도 건지지 못하면서 우수아까지 버리는 게 제대로 하는 교육인가'라고 묻고 있다.

반면 한국일보는 칼럼 '평준화 해제 아직 이르다'(11·4)에서 '몇 년 전부터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평준화가 난도질 당하더니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자 그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평준화로 전체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반론을 폈다. 칼럼은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부류는 기득권층이며, 성적이 처지는 90%의 학생보다 우수한 10%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뿌리깊은 선민의식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폐지론을 질타했다. 이어 '평준화 해제는 입시전쟁이 3년 앞당겨지는 것'이며 '그로인해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입시 스트레스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폐지주장,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

한겨레는 '일부 언론의 평준화 폐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미디어 비평기사(10·30), '(정운찬 서울대 교수의)평준화 해제주장 엉터리 근거'라는 기자칼럼 등을 통해 폐지론을 비판했다. 또 외부칼럼(김종엽 한신대교수 10·16)에서 '평준화 폐지 주장은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와 계급 재생산과 계급적 분리욕망이 뒤얽힌 자리에서 뿜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뒀다.

동아일보는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필요하다'는 사설(10·24)에서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문화일보는 '고교 평준화 문제 공론화 해야'라는 사설(10·24)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 쪽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는 '평준화 논란 과열, 문제없나' 특집 시리즈(10·31) 보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 문제를 진단했다. 시리즈는 '평준화 찬성 쪽은 계층간 위화감 방지, 통학 용이, 입시중심 교육 방지 등을 들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 선택권 침해, 수준이 다른 학생에 대한 획일적 수업,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을 꼽는 등 30년간 계속된 논쟁'이라며 평준화 논란이 교육혼란은 물론 경제·사회적 계층간 갈등,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결국 '대학입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묵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리=이광이·안길찬기자〉

폐지땐 중3병·재수생 누적 불보듯 기본틀 유지하며 운영 보완해 갈 것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계속되자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한다면 지난 74년 이 제도의 도입 당시의 상황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누적 등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74년 당시의 사회·교육적 상황은 중학생이 극심한 고교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 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류고 진학을 위해 해마다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는 사회병리 현상은 심화되고 중학교 교육은 파행운영됐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을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평준화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수의 31.6%(일반계 고교의 52.0%), 학생의 47%(일반계 학생의 67.4%)가 이 제도를 적용 받고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대안학교 등 설립 확대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입시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국제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의 설립과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핵융합연구장치개발(222억원), 자기공명장치설치(30억원),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12억원), 고가특수연구기기(25억원), 특수연구소재은행(23억원), 전문연구정보센터(44억원) 등의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기초연구진흥을 위해 과기부는 2004년도에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약 200억원이 증액된 2800억원 규모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약 400억원이 증액된 2064억원의 규모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최소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중에 있음을 밝힌다.

(연구개발기획과)

"군정 - 군령 분리 추진"

한국 일원화… 군국주의 국가나 분리

국방부는 〔문화일보〕 11월1일자 '군정-군령분리 국방혁신'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우리나라의 국군조직 체계와 군 통수권 행사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화일보 보도〕

국방부가 민간인 직선대통령 선출 11년만에 비로소 문민통제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부혁신 분권계획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두었던 16개 비편제기구와 그 소속 현역 장교들이 군대로 복귀하고 일부는 정부가 직접 직제 및 정원을 통제하는 공식편제기구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정했던 국방부 파견근무 현역장교의 수도 정부직제와 정원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국방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은 국방부 문민화 계획이 한 획을 그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참여정부가 해당 부처와 함께 조용하게 진행해온 정부개혁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민주국가의 국방부 직제와 체제처럼 '군령과 군정이 분리된' 국방부 본부조직 개편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국방부 입장〕

헌법 제74조 제1항 및 국군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국군조직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군조직법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 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군정-군령일원을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군령권의 행사도 군정권과 함께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군정-군령의 분리주의는 제정 독일이나 패전전의 일본과 같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로서 군령권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해 국가원수 직속하에 관장시키는 제도이다. (조직관리과)

전문가 4인 특별좌담

"FTA, 수출 활력소… 비껴갈 수 없

세계 각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맺기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대와 국회 비준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한·칠레 FTA는 국익을 위해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대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답보상태에 있는 한·칠레 FTA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실마리를 찾는 기회를 갖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 농민신문사 오덕화 논설위원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는 '국정브리핑' 박상기 전문위원이 맡았다.

〈편집자주〉

△**사회**(박상기 전문위원)=원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과·배 완전히 예외인정

△**안호영 국장**=FTA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봅니다. 현재 FTA 체결국은 전세계적으로 184개국에 이르고 FTA에 의해 이뤄지는 무역은 전체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FTA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칠레와 첫 FTA를 맺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공산품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 농산물분야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FTA 발효가 지연됨으로써 작년에 칠레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가 올해(1~4월)에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2·3·4위는 아르헨티나·브라질·프랑스 등으로 칠레와 올해 FTA를 발효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무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산품에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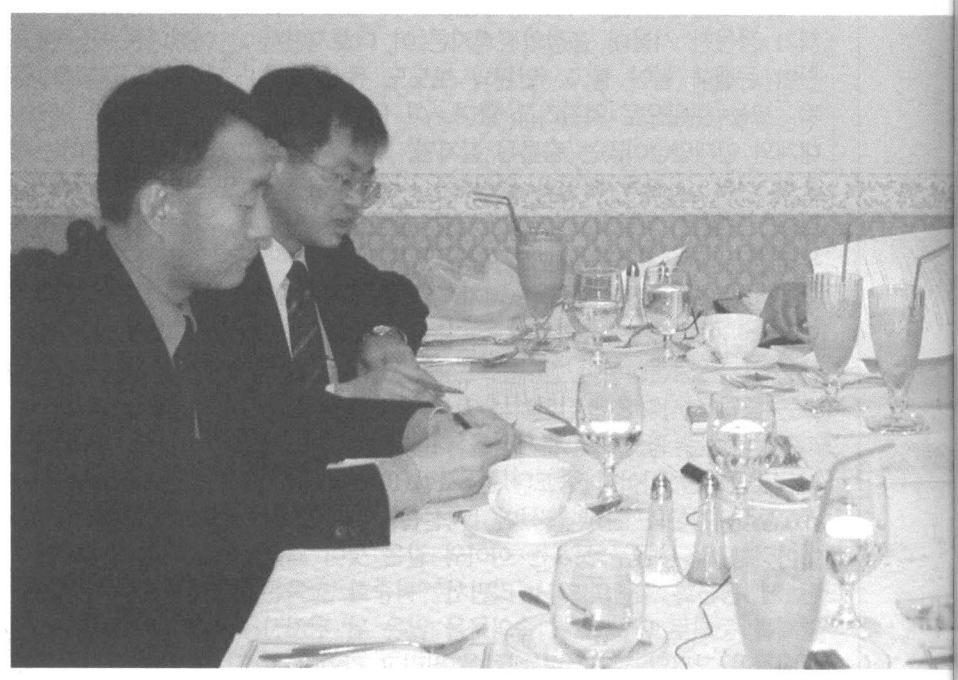
△**현오석 소장**=한·칠레 FTA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칠레 FTA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칠레 FTA는 효과도 크고 농산물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해의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거나 기타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번째는 일반 국민들도 무역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FTA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TA에 대한 문제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어느 정책이나 급격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로 피해 받는 계층에 대해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준을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은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피해의 시작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반대로 수출에는 당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과 칠레간의 FTA가 발효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FTA 특별좌담회는 두시간동안 열띤 토의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시계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 안호영 다자통상국장.

4대 지원법으론 농민설득 한계
피해계층 지원시스템이 급선무
비준 늦어질수록 상대적 불이익

△**사회**=한·칠레 FTA가 5년 동안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군요.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피해 지원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특별법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오덕화 실장**=정부의 한·칠레 FTA 비준 전략 중에 4대 농업지원법을 연계시켜서 비준을 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해 일반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특별법이 'FTA 이행특별법'을 제외하곤 한·칠레 FTA 때문에 추진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 '부채경감특별법'은 농업부채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어차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농민단체들이 갖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부채경감특별법의 경우 6.5% 짜리 정책자금 9조6000억원 지원을 포함시켰는데, 이를 3%로 낮추고, 경영개선자금 2조3000억원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농특세법 10년연장 바라

'농특세법'의 경우도 5년동안 연장해주겠다 하는데, 공히 10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니까 농민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국장**=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농촌의 생활수준, 부채 등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한·칠레 FTA가 비준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FTA를 맺게 되면 그 어려움은 배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현실과 함께 한·칠레 FTA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뤄야 합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4대 특별법입니다.

△**현 소장**=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정책에 대해 일관된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칠레와의 FTA도 실제보다 더 불리한 사실을 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특별법안은 FTA만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 나름대로 농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를 계기로 4개 법안이 마련된 것이며, 지속적인 대응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무역하는 사람들도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농민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목소리만 높인다고

없는 현실"

방향으로 최세균 연구위원, 오덕화 논설위원실장,

참 석 자

〈가나다순〉

△안 호 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오 덕 화
(농민신문사 논설위원실장)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오 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

사회 : 박상기 전문위원
정리 : 최 강 · 선경철 기자

공격합니다. 최근 경제단체에서 '농업을 돌아보자'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필요합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도 중요하나 서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한 · 칠레 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농업개방 파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농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세균 박사**=농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복잡합니다. 농업분야까지 경제논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쟁력이 없으면 여지없이 탈락하는 것이고, 주변에서는 '농업이 정부 의존적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농업계에서는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이 소외됐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이 소외됐던 것도 사실이고, 정부 의존의식이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도 시장원리 따라야

그래서 앞으로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소외 농업도 시장진입에 의한 어떤 경제신호가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농업경영체제가 생겨나고, 또 그렇게 생겨난 경영체제라는 것은 다양한 품목, 즉 '내가 농업주체로서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같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탈락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농업분야도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FTA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시장개방의 한 형태입니다.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자국에 유리한 FTA를 추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TA를 추진하되, 자국의 이익, 산업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면서 대상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 칠레 FTA를 비롯한 FTA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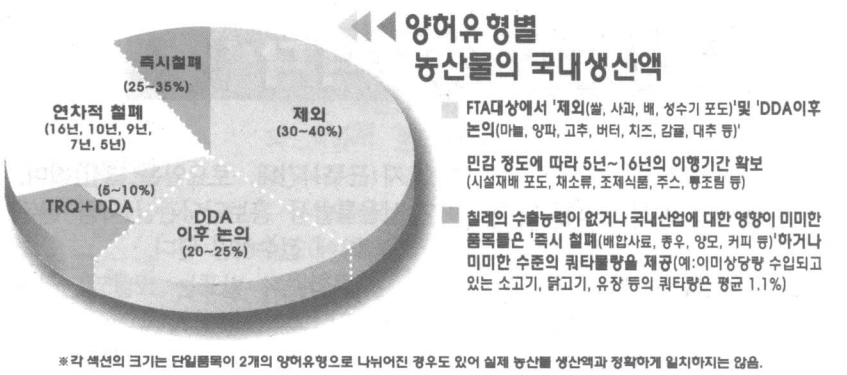
△**안 국장**=국내총생산(GDP)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FTA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무역의존도가 20%에 불과한 일본과 중국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무역자유화는 시장 확보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은 독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로만 이야기하면 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FTA를 하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한 단계씩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걸음도 못나가게 됩니다.

△**현 소장**=FTA 추진을 위해서는 리더쉽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이 단기적 이해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FTA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자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처녀 총각이 짝을 찾듯이 상대국에서도 우리가 주저하면 다른 짝을 찾게 됩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잃는다면 우린 미아가 되고 맙니다.

〈정리:최 강 · 선경철기자〉



※각 섹션의 크기는 단일품목이 2개의 양허유형으로 나뉘어진 경우도 있어 실제 농산물 생산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잘못된 몇가지 오해

주요과실 시장접근 최소화

한 · 칠레 FTA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규제개혁의지를 국제무대에서 평가받는 시험대이기도 한 한 · 칠레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신뢰도 실추 등이 예상된다.

한 · 칠레 FTA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몇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본다.

△한 · 칠레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해 우리 농업을 붕괴시킨다는 데.

-칠레는 사과 · 포도 등 일부 과실류만 제외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농산물이 많지 않다.

한 · 칠레 FTA에서는 주요 과실들의 시장접근을 최소화했으며 쿼터제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도 대부분 기존 수입을 대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해 칠레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했다.

△칠레에서는 이미 우리 공산품 시장 점유율이 높아 추가로 수출이 늘어날 수 없어 FTA체결의 실익이 없다는데.

-현재는 우리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칠레의 활발한 FTA체결로 이러한 경쟁력 우위가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16.9%에서 13.8%(2003년 1~4월)로 떨어졌으며 핸드폰은 10.7%(2002)에서 7.7%(2003년 1~4월)로 줄었으며 멕시코 정부조달 시장 입찰자격은 32개 FTA체결국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FTA는 수출을 늘려가기 위해서 뿐 아니라 현재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FTA득실은 이러한 추세에 뒤처질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칠레가 2010년까지 자발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므로 우리 농업의 피해를 감수해가며 FTA를 체결할 실익이 없다는데.

-칠레는 APEC 보고르 선언에 따른 이행계획서에서 2010년까지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그 구체적인 추진 여부는 FTA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칠레가 자발적,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철폐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외에도 미국 · EU · EFTA(스위스 등 4개국)도 이러한 배경아래서 칠레와 FTA를 체결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다른 나라보다 적게 확보했다는데.

우리는 민감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외를 확보했다.

EU는 HS8 단위로 전체 품목의 22%가 예외이며 사과 · 배는 예외품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HS 10단위로 사과 · 배를 포함 전체 품목의 28%가 예외됐다.

자동차·휴대폰 수출 점차 줄어 관세철폐 예외품목 많이 확보

<칠레가 체결한 FTA에서의 농산물 예외수준 비교>

FTA상대국	상대국의 예외품목 수	칠레의 예외품목 수
캐나다	96	75
멕시코	82	99
EU	520*	105
한국	394*	54

* EU는 HS 8단위로 전체 품목의 22%가 예외(사과, 배는 예외품목이 아님)
** 한국은 HS 10단위로 사과, 배를 포함 전체 품목의 28%가 예외

사람을 찾습니다

노사정위 조사·분석 담당

노사정위원회는 의제 조사·분석을 담당할 유능한 전문인력(전문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

채용되는 이는 의제조사·분석업무를 맡게되고, 자격기준은 △법학·경제학·노사관계학·경영학·신문방송학·사회학·심리학 기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경력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노사정위원회 행정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정위원회 행정과(02-2198-3109, 312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웹기획 전문요원

서울시는 웹사이트 구축 및 홍보에 있어서 기획과 업무의 진행 및 마케팅 등을 총괄할 웹기획 전문요원(지방계약직 "가"급)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의 경력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근무시간내, 토요일은 13시)이며,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실(시청 본관 206호)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5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02-731-6111, 6511

기계 전기 정보통신 운영 일용직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은 박물관 신축과 관련해 기계·전기·정보통신 등 각종설비의 기능 및 운영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일용직(6명)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기계분야는 기계실 운영경력 5년 이상, 전기분야는 전기실 운영경력 5년 이상, 통신분야는 중앙감시실(관제센터) 운영경력 5년 이상이어야 응모가 가능하다.

채용기간은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보수는 월 140만원 수준이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지)으로 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2003년 11월11(화)까지이며 제출처는 E-mail(cmg2001@museum.go.kr)과 FAX 02-796-3850)로 할 수 있다.

문의 02-796-3851~2

KTV 외주프로그램 제작업체 공모

10~13일 접수… 11월27일 발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KTV 국립방송(ch14)·위성(ch151)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제작업체를 공모한다.

대상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지방화시대 △시사·국정 △교양 △공공 △자유소재 등 6개 분야로 각 30분 26편이며 자유소재로 10~60분품이다.

업체 선정기준은 프로그램 제작기획서, 구성안 및 응모 프로그램 홍보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획의도, 내용, 완성도, 편당제작비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1월10일~13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1월27일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는 KTV 홈페이지(www.ktv.go.kr)와 기획편성과(02-3450-2184)로 하면 된다.

정부청사 레이더

행 사

직업능력개발 촉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기능존중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11월 한 달간을 '능력개발의 달'로 정해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 직업훈련·자격박람회, 대한민국명장전,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등 행사를 펼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직업훈련·자격박람회를 광주와 대전에서 갖고, 12월4일부터 6일까지는 부산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명장회는 명작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제작모습을 시연하는 '대한민국 명장전'을 12일부터 21일까지 압구정동 상설 전시관에서 갖는다.

다양한 세미나 준비돼 각 지방노동청 주최로 직업능력개발 연찬회가 열리고, 25일에는 인적자원개발세미나가 코엑스가 개최된다. 12월4일에는 기능장려심포지엄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

문의, 02-503-9754-5

공 모

교육과정 우수고교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효율적 편성·운영중인 고등학교를 선정·포상키로 하고 대상학교를 25일까지 공모한다.

선정대상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편성 △인근학교와의 연계 및 외부기간 활용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편성 △교과교실, 다목적 교실 등 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효율적인 시간표 운영 △기타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의 사례다.

공모분야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1학급 이하인 소규모 분야와 그 이상인 중·대규모 분야로 나뉘고, 이밖에 실업계,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20개 학교에는 교육부총리상이 주어지고, 시상식은 12월말에 이뤄진다.

문의, 02-720-3401

의식주 중심 여성사 기록물

여성부는 여성사전시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을 위해 우리 생활속에 담겨 있는 여성들의 자기표현과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사연과 함께 공모한다.

응모 대상 작품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여성의 갈등, 극복, 공유의 역사가 담긴 다양한 기록물, 창작품, 영상물로 △여성의 기록, 이어내림의 힘 △이름없는 예술가인 여성들 △즐거움을 일으키는 여성의 창조적 일상 등 분야로 구분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 하며 입상자에게는 최우상 1명에 100만원, 우수상 4명에 50만원이 주어진다. 심사결과는 27일 발표된다.

문의, 02-824-3086

신약개발사업 기관·연구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공고하고, 신약개발 사업에 참여할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연구자를 모집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12월1일 서울 동작구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부는 오는 12일 오후 2~3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www.hpeb.re.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2194-7227

'환경-무역협상 방안' 논문

환경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협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의견을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환경-무역연계 국제협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문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동향과 대응방안'(환경라벨링·환경관련 무역규제 포함)과 'DDA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협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공모하며 최우수논문에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부상으로 300만원의 상금, 각 분야 우수논문에는 환경부장관 표창 및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요령 및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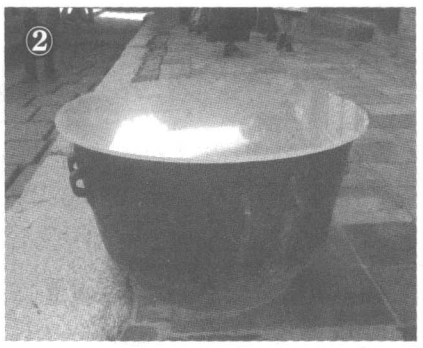
문의, 02-504-9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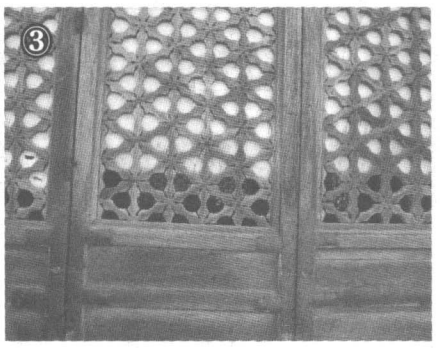
문화정보화 우수 석사논문

한국문화정보센터는 문화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우수 석사논문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상분야는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유산정보화, 문화행정정보화 등 문화정보화 관련된 이슈로 내년 2월 석사 ⤴

KTV 생방송 토론광장 '클릭 10p.m.' (월~금 오후 10시)





'창경궁 관리의 티' 4개 고칠 수 없나

우리 선조들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궁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관람객들의 관람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보다 세심한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 미끄럼틀 되어버린 '답도'

〈사진1〉 창경궁 명정전 좌우 계단 사이에는 임금님이 연(가마)을 타고 다니던 '답도'라는 비스듬한 석판이 있다. 석판의 중앙에는 군주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얀 날개를 활짝 편 한쌍의 봉황조각이 장식돼 있다. 봉황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군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의를 표해야 할 답도가 수많은 관람객과 아이들의 미끄럼틀로 남용되는 바람에 때가 반질반질한 평범한 돌로 바뀌었다.

투명 유리로 용도 알릴만한 '드므'

〈사진2〉 드므라는 청동그릇은 궁궐에서도 왕이나 왕비가 쓰는 중심건물에만 놓여 있는 귀중한 것으로, 유사시 목조건물에 불이 붙었을 때를 대비해 물을 채워놓던 소화기구이며, 하늘의 화마가 물에 비친 자기의 흉측한 얼굴에 놀라 도망친다는 주술적 의미도 담고 있는 귀중한 상징물이다. 그런데 많은 관람객들이 그 안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간다.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두꺼운 불투명 유리를 위에 씌운 것 같은데,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거의 없게 됐지만 그 대신 관람객들이 드므라는 것이 있는 것을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잘 파손되지 않는 두꺼운 투명 유리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명정전 밑부분 창호지는 어디에

〈사진3〉 정전인 명정전을 비롯한 창경궁 주요목조건물의 창 아랫부분이 창호지가 없이 뻥 뚫려있다. 이유는 사극이나 영화에서 방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는 장면을 본 관람객들이 하도 많이 구멍을 뚫어 놓으니, 문화재 훼손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위치의 창호지를 아예 떼어 놓은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대형소화기만 눈에 띄는 환경전

〈사진4〉 임금님의 침전이었던 환경전의 정면에는 두개의 빨간색 대형 소화기가 놓여 있다. 유사시 화재를 대비해 빨리 발견될 위치에 놓은 것은 알겠지만, 오래된 건물인 문화재는 뒷전이고 소화기만 두드러져 보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국정넷포터 발언대

노인 교통수당, 교통카드로 바꾸자

월 1만2000원으로 무얼 하겠나

1만2000원으로 버스를 몇번 탈 수 있을까? 현금탑승(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7번 타고 100원이 남는다. 갑자기 웬 1만2000원 타령이냐고 물어올지도 모르겠다. 1만 2000원은 현재 복지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 교통수당이다.

버스는 재정난을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가 없어진지 오래고 지하철은 신분증이나 경로증을 보여주면 무임승차권을 주지만 직원의 신분확인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야 표 한장을 건네받을 수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노인들에게 월 1만2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적은 돈이지만 알아서 전철과 버스를 적절히 이용하라는 말과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통 지원비를 현금지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노인들이 그 돈을 타가지고 나올때 더 초라한 마음이 드실것 같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돈가치가 없는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불과 1시간 안에도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말이 교통수당이지,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물론 필요하신 부분에 사용하겠지만-이미 교통 지원비로서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70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기준 120%가구)에는 월 3만5000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 교통지원비라면 다른 경로 수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교통지원비 만큼은 현금이 아니라 승차권 개념으로 지급돼야 한다.

그렇다면 경로 승차권 제도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개념의 버스 카드처럼 '노인 우대 교통카드'로 발급해 드리면 어떨까. 이 카드엔 노인의 신분을 알리는 사진과 일련번호 등이 찍히고 기존의 보통 교통카드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지하철 창구에서 무임표를 받는 번거로움도 해결될 수 있다. 또 버스이용시에는 버스 조합과의 조율을 통해 일정금액을 학생처럼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현금 보다는 우대카드를 제공해 매월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교통수당 지급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진희 titlis97@yahoo.co.kr

학위 취득예정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사람이면 된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개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2월8일부터 12일까지.

문의, 02-2011-6634

2003 우수기획 DVD 작품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2003 우수기획 DVD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 행사는 고화질 영상, 입체적 음향뿐만 아니라 다국어 자막·더빙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영상 등의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영상매체인 DVD가 최근 정체 일로에 있는 비디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급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마련했다.

교육·어린이/기획·교양(문화예술)/애니메이션/극영화·드라마의 총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국산창작 영상물을 담은 DVD로서 상업용·비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출품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1편과 분야별 우수상 각 1편씩 총 5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작품은 구입 지원을 통해 국내외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및 문화홍보 관련 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서는 문화관광부(www.mct.go.kr)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2-3704-9630

알 림

직장예절·이미지관리 강좌

문화관광부는 대학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 이전에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지도, 직장예절, 이미지 관리법 등의 교양강좌와 메이크업, 자기연출법, 스포츠댄스, 전통문화체험, 산업현장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장애체험 활동, 판소리 민요 따라잡기, 한지공예, 인터넷 방송 직업체험, 영화감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미래의 직업 진로 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유명인사 초청 특별 강좌, 청소년 경제 교육, 성교육 등의 교양강좌 등이 펼쳐진다.

또한 제주에서는 승마교실 및 여성호신술 교육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2-3704-9920

〈안길찬기자〉

입사 모의면접 "신선·재밌어요" 이미지 메이킹

"지금 메이크업 강의 가요. 메이크업 끝나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도 가야 되는데…."

지난 3일,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시위하듯 낙엽을 하나 둘 떨궈내던 이화여자대학교 교정. 옷깃을 잔뜩 여민 채 종종걸음을 재촉하던 국민대 경영학과 졸업반 백경민 씨는 '프로그램들을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부터 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행사 또 있겠죠? 취업정보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 데 조금은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선해요. 그리고 재밌어요!"라고 말하고는 다시 길을 재촉한다.

지난 3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비전 2004 여성취업정보 한마당'이 열려 여성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지원서 작성법강좌 북적

노동부가 주최하고 (주)잡코리아가 주최한 '비전 2004 여성취업정보 한마당'. 이날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여성 3000여명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기존 채용박람회가 취업알선에 중점을 둔 반면 '여성취업 정보한마당'은 취업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즉 취업정보와 전략·모의 입사면접·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는 여성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전선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꾸몄다는 점이다.

'알선보다 준비' 자신감 심어줘

톡톡 튀는 이력서 만들기 인기

"취업전문가들이 마련한 취업전략짜기 A to Z이나 취업전략전술한마당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접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방대학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취업 준비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해 정보라도 얻을까 해서 전북 전주에서 올라왔다는 이른바 '취업삼수생' 김예정 씨. 자신을 위해 새벽기도를 다니는 모친이 안쓰럽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사진대신 커리커쳐를

'이력서에 커리커쳐 사진을 붙인다?' 사실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만의 '톡톡튀는' 개성과 또 그러한 마인드를 존중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서 커리커쳐 이력서는 그다지 특이한 일도 아니다.

"내 모습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커리커쳐를 이력서에 붙인다는 것도 흥미롭고요. 모르고 있던 부분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즐겁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여은애 씨. 예전에 비해 취업문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꼭 자신에게 맞는 직장이 있을 거라며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이력서 사진 커리커쳐' 행사장 바로 앞. 서울지방노동청이 설치해 놓은 '인턴사원 접수코너'에도 취업준비생들이 북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꼭 전공만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졸업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는 노보영 씨.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정부의 이런 제도를 알리는 동시에 참여를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지방청 서대문고용안정센터 김동숙 팀장은 "인턴사원제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럴 듯한 직장'을 찾기 보다 이런 인턴사원제를 활용,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그는 이 행사와 별도로 '여성취업을 위한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오는 21일까지 행사사이트(woman.jobkorea.co.kr)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전한다.

〈채수일기자〉